

<div data-bbox="204 356 569 445" data-label="Section-Header"> <h1> 보도자료 </h1> </div> <div data-bbox="263 465 512 510" data-label="Text"> <p>2012. 8. 20.</p> </div>	<div data-bbox="649 255 759 358" data-label="Image"> </div> <div data-bbox="932 248 1287 358" data-label="Text"> <p>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</p> </div>	
	담당부서	양형위원회
	담당자	운영지원단장 최승원 (☎ 3480-1924)
	공보관실 ☎ 3480-1451	

공직선거법 양형기준 최종 발표

- 양형위원회는 2012. 8. 20. 16:00 제43차 전체회의 개최
- 『선거범죄 양형기준』 최종 의결 ⇒ 2012. 9. 1.부터 시행
- 금품살포·흑색선전 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 권고하는 엄정한 기준 마련

① 선거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 및 시행

- ① 양형위원회는 2012. 8. 20. 16:00 제4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『선거범죄 양형기준』을 최종 의결
- ② 시행일을 2012. 9. 1.로 정함 ⇒ 9월 중 4·11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기소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다수의 사건에 이번 양형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임

② 양형기준 의결 과정

- ① 과거 6년 동안의 선거사건 판결을 사전에 분석하고, 이후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및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 거쳐 지난 6월 18일 양형기준안 마련
- ③ 양형기준안 의결 후 의견수렴절차 통해 각계의 의견 반영
 - 7. 16. : 공청회 개최. 4인의 전문가와 일반 방청객의 의견 청취
 - 6. 20. ~ 7. 20. : 총 28개 관계기관에 의견조회. 대법원, 국회, 법무부, 대한변협, 중앙선관위 등 8개 주요 기관의 의견 회신받음
 - 7. 23. : 자문위원회의 개최. 법학계, 언론계, 교육계,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자문위원들로부터 자문의견 청취

③ 선거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

가. 금권선거에 대한 엄정한 양형기준 마련

- ①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‘**매수 및 이해유도**’ 유형에 대하여는 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법정형도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**당선무효**에 해당하는 **징역형**만을 권고함(아래 표의 **기본영역** 및 **가중영역** 참조)
- ② 일반적인 매수 행위 이외에 **당내경선 관련 매수**, **공천 관련 금품수수**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**당선무효**에 해당하는 **징역형**을 권고하는 엄정한 기준 설정
- ③ **후보자 본인이나 그 가족·선거관계인의 매수 행위**, **후보자·당선인을 매수하는 행위**는 **가중 처벌**

※ ‘매수 및 이해유도’ 유형의 형량범위표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당내경선 관련 매수	- 8월, 50만 원 - 300만 원	4월 - 1년	8월 - 2년
2	일반 매수,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	- 10월, 100만 원 - 500만 원	6월 - 1년4월	10월 - 2년6월
3	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	4월 - 1년, 150만 원 - 700만 원	8월 - 2년	1년 - 3년
4	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, 후보자 매수	6월 - 1년4월, 500만 원-1,500만 원	10월 - 2년6월	2년 - 4년
5	당선인에 대한 매수	8월 - 1년6월	1년 - 3년	2년6월 - 5년

- ④ ‘**기부행위 금지·제한 위반**’ 유형 역시 원칙적으로 **당선무효**에 해당하는 **벌금형** 또는 **징역형**만을 권고(형량범위표 상 **기본영역** 및 **가중영역**에 **당선무효**에 해당하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만 있음)하고, 일반인의 범행보다 후보자,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·비속, 선거관계인의 범행을 **가중 처벌**

나. 흑색선전에 의한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

- ① ‘**허위사실공표·후보자비방**’ 유형에 대하여도 과거의 관행보다 처벌을 강화하여 ‘기부행위 금지·제한 위반’ 유형과 같이 원칙적으로 **당선무효**에 해당하는 **벌금형** 또는 **징역형**만을 권고

② ‘허위사실공표·후보자비방’ 유형 중 자신의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‘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’ 행위에 비하여 상대 후보자에 대한 흑색선전을 하는 ‘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’ 행위를 가중 처벌하고, 아울러 전파속도가 빠르거나 상대방이 다수이어서 파급력이 큰 인터넷과 SNS 등을 이용한 행위를 가중 처벌하기로 함

③ ‘허위사실공표·후보자비방’ 유형의 경우, 선거 전에 피고인이 사과를 하거나 시정조치 등을 하여 공표·비방의 대상인 후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특별히 형을 감경하도록 하는 반면, 선거를 마친 후 화해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됨으로 인하여 민의가 왜곡된 결과를 시정할 수 없으므로 특별히 형을 감경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도록 권고

다. 선거운동기간위반·부정선거운동 유형에 대한 처벌 기준

- 선거운동기간이나 방법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제한을 위반한 ‘선거운동기간 위반·부정선거운동’ 유형은 행정법적인 성격이 강하고 다른 선거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권고하되, 상대적으로 중한 사안에 대하여는 징역형 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양형기준 설정

4. 향후 일정

- 2012. 8.말 : 양형기준 판보 게재(시행 : 2012. 9. 1.)

※ 다음 회의는 2012. 10. 26.(금) 개최 예정

⇒ 조세, 공갈, 방화범죄 양형기준 검토 예정

I. 선거범죄 양형기준

① 선거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 및 시행

- 양형위원회는 2012. 8. 20. 16:00 제4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『선거범죄 양형기준』을 최종 의결
- 시행일을 2012. 9. 1.로 정하였으므로, 2012. 9. 1. 이후 공소가 제기되는 범죄에 대하여 적용됨 ⇒ 9월 중 4·11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기소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다수의 사건에 이번 양형기준이 적용될 것임

② 양형기준 의결 과정

- 2006. 1. 1.부터 2011. 12. 31.까지 선고된 선거범죄 1,664건의 판결을 분석하여 양형기준 초안 마련 자료로 사용함
- 2012. 3.부터 약 5개월 동안 전문위원단 전체회의 7회,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4회 거치면서 위원회 내에서 심도 있는 논의 진행함
- 6월 18일 양형기준안 의결 후 의견수렴절차 통해 각계의 의견 반영
 - 7. 16. : 공청회 개최. 4인의 전문가와 일반 방청객의 의견 청취
 - 6. 20. ~ 7. 20. : 총 28개 관계기관에 의견조희. 대법원, 국회, 법무부, 대한변협, 중앙선관위 등 8개 주요 기관의 의견 회신받음
 - 7. 23. : 자문위원회의 개최. 법학계, 언론계, 교육계,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자문위원들로부터 자문의견 청취

③ 선거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

가. 범죄 유형 및 형량 범위

1. 매수 및 이해 유도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당내경선 관련 매수	- 8월, 50만 원 - 300만 원	4월 - 1년	8월 - 2년
2	일반 매수,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	- 10월, 100만 원 - 500만 원	6월 - 1년4월	10월 - 2년6월
3	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	4월 - 1년, 150만 원 - 700만 원	8월 - 2년	1년 - 3년
4	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, 후보자 매수	6월 - 1년4월, 500만 원 - 1,500만 원	10월 - 2년6월	2년 - 4년
5	당선인에 대한 매수	8월 - 1년6월	1년 - 3년	2년6월 - 5년

▷ 일반인의 방송·신문 등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(제235조 제1항)는 제2유형에, 후보자나 선거관계자의 방송·신문 등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(제235조 제2항)는 제3유형에 포섭

2. 기부행위 금지·제한 위반

유형	감경	기본	가중
기부행위	50만 원 - 300만 원	- 10월, 100만 원 - 500만 원	8월 - 2년

3. 허위사실공표·후보자비방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후보자비방	50만 원 - 150만 원	- 8월, 100만 원 - 300만 원	6월 - 1년, 250만 원 - 400만 원
2	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	70만 원 - 300만 원	- 10월, 200만 원 - 800만 원	8월 - 2년, 500만 원 - 1,000만 원
3	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	- 8월, 300만 원 - 600만 원	6월 - 2년, 500만 원 - 1,000만 원	1년 - 3년

- ▷ 당내경선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죄(제250조 제3항)는 제2유형에 포섭
- ▷ 여론조사결과 왜곡 논평·보도 금지 등 위반죄(제252조 제1항)는 제1유형에 포섭

4. 선거운동기간 위반·부정선거운동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선거운동기간 위반	30만 원 - 90만 원	70만 원 - 150만 원	- 8월, 100만 원 - 300만 원
2	선거운동방법 위반	50만 원 - 90만 원	70만 원 - 200만 원	4월 - 1년, 100만 원 - 400만 원
3	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	- 10월	8월 - 1년6월	1년 - 3년

나. 주요 특징

(1) 금권선거에 대한 엄정한 양형기준 마련

-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'매수 및 이해유도' 유형에 대하여는 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법정형도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 고려하여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만을 권고함(위 가. 1.항 형량범위표의 기본영역 및 가중영역 참조)
 - ※ 선거범죄는 일정액(당선인 100만원, 선거사무장 등 300만원)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, 선거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10년간,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등 강력한 효력이 있음
- 일반적인 매수 행위 이외에 당내경선 관련 매수, 공천 관련 금품수수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권고하는 엄정한 기준 설정
- 후보자 본인이나 그 가족·선거관계인의 매수 행위, 후보자·당선인을 매수하는 행위는 가중 처벌

- ‘기부행위 금지·제한 위반’ 유형 역시 원칙적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만을 권고(위 가. 2.항 및 3.항 형량범위표의 기본영역 및 가중영역 참조)하고, 일반인의 범행보다 후보자,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·비속, 선거관계인의 범행을 가중 처벌

(2) 흑색선전에 의한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

- ‘허위사실공표·후보자비방’ 유형에 대하여도 과거의 관행보다 처벌을 강화하여 ‘기부행위 금지·제한 위반’ 유형과 같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만을 권고
- ‘허위사실공표·후보자비방’ 유형 중 자신의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‘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’ 행위에 비하여 상대 후보자에 대한 흑색선전을 하는 ‘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’ 행위를 가중 처벌하고(법정형의 차이, 행위의 파급력 등 고려한 것임), 아울러 전파속도가 빠르거나 상대방이 다수이어서 파급력이 큰 인터넷과 SNS 등을 이용한 행위를 가중 처벌하기로 함
- ‘허위사실공표·후보자비방’ 유형의 경우, 선거 전에 피고인이 사과를 하거나 시정조치 등을 하여 공표·비방의 대상인 후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특별히 형을 감경하도록 하는 반면, 선거를 마친 후 화해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됨으로 인하여 민의가 왜곡된 결과를 시정할 수 없으므로 특별히 형을 감경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도록 권고

(3) 선거운동기간위반부정선거운동 유형에 대한 처벌 기준

- 선거운동기간이나 방법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제한을 위반한 ‘선거운동기간 위반·부정선거운동’ 유형은 행정법적인 성격이 강하고 다른 선거범죄에 비하

여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권고하
되, 상대적으로 중한 사안에 대하여는 징형 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
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양형기준 설정

4 향후 일정

● 2012. 8.말 : 양형기준 관보 게재(시행 : 2012. 9. 1.)

※ 다음 위원회 회의는 [2012. 10. 26.\(금\)](#) 개최 예정

⇒ 조세, 공갈, 방화범죄 양형기준 검토 예정